

| 보 도 자 료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
| 배포 일자 | 2023.11.10.(금) 총 3매 (본문 2, 붙임 1) | |
| 자료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연구본부 항만정책·운영연구실 - 김세원 실장 (051-797-4660) -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 |
| 배포 부서 | •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96) | |
| 보도 일시 |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 |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 | |

KMI, 항만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 관리방안 제시

- 갈등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필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항만의 개발과 운영 중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법·규정 집행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KMI 김세원 박사(항만정책·운영연구실장) 연구팀은 항만의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공론화와 조정기능 강화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갈등관리 역량 강화 측면에서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구성원 상호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이해당사자 특정이 어렵고 발생 원인도 복합적이며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국가적 대표적인 인프라인 항만에서도 개발부터 운영, 재개발 전반에 걸쳐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항만과 관련하여 공공갈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례는 1990년 이후 총 62건이 발생했다. 항만 개발단계(43.5%, 27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갈등 주체별로는 정부-민간(66%, 41건) 사이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갈등 쟁점은 주로 △관할권 △행정사무 △운영·작업권 △보상 △비용 △지역개발이었으며 갈등 종결 방식

은 전체 사례 중 약 절반(30건)이 법원판결을 통해 종결되었다.

예를 들어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그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보상비용 산정방식 문제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과 갈등 원인 조사 및 대안 마련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갈등 종료 후 갈등치유 및 관계회복을 통한 갈등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갈등 발생 빈도가 높았던 항만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갈등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즉,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갈등 영향분석을 통해 갈등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기본설계 전후로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만약 실시설계 공고 이후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갈등조정 협의회를 즉각 구성·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안전 회부를 통한 조정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갈등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간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갈등관리 매뉴얼 및 항만 갈등지수 개발, 정책심의위원회 기능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단계적 갈등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갈등 지수에 기반한 갈등 모니터링 및 갈등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항만정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갈등 예상 및 진단을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KMI 김세원 실장은 “항만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공론화와 조정기능 강화, 정책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갈등관리 역량 강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고 제언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항만연구본부 항만정책·운영실 김세원 실장(051-797-4660, ksw@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항만개발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방안(KMI)

